

전주 대변혁 기반 다졌다

전주시 민선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민선8기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개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의 변화에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 시정연구원 설립, 종합경기장 개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강한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 전주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대변혁의 새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빠른 혁신의 열쇠, 과감한 규제 개혁
민선8기는 전주에 강한 경제를 가져올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력은 오직 행정의 힘만으로는 갖춰지지 않는다. 민간이 투자해야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순환이 일어난다. 민간의 투자를 행정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기조 아래, 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이 만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민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먼저 시는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개편을 위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광역도시 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빠른 규제 개혁과 개발을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9월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장 발전을 이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시정연구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과 함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16일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시정연구원 출범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개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및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0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전주 대혁신 이끌다
민선8기는 전주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최대 과제인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개발에도 빠르게 착수했다. 전주시는 이 두 곳을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구상에서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 다양한 대형 국제회의의 유치를 통해 시에서 진행 중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먼저 2023년 상반기까지 원료를 목표로 노후화된 야구장 철거에 착수했다. 철거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 뒤 건축물 밀실신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철거부지에 대해서는 안전 펜스와 부지 정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축제 등의 행사공간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소유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도 민선8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8월 (주)자광 회장과 공개적으로 만남을 갖고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시는 밤알못 집인 석면이 사용돼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옛 대한방직 부지 내 폐공장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고, (주)자광은 이 요청

을 적극 수용해 석면 건축물 철거를 현재 추진 중이다.
물론 대한방직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지역건설업체 참여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거친 다음 빠르게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왕의 발자취가 새겨진 천년도시 전주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오랜 전조선왕조의 분향으로 곳곳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민선8기는 전주가 보유한 유무형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가치를 높여 재창조하고 이를 강한 경제의 큰 축으로 삼으려 한다.
먼저 시는 전주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왕의 공원 프로젝트'는 경기전과 전라감영을 비롯한 조경단, 객사, 오목대, 이목대 등 전주의 다양한 유적과 유무형 자산을 한데 엮어 거대한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시는 현재 공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대 고도 외에 추가로 고도가 지정 가능해짐에 발맞춰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후백제 왕도 역사골목 조성도 추진한다. 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후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0월 전주를 방문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20년 제정)에 후백제를 추가로써 개정하는 내용을 직접 건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김성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의 발의를 거쳐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지난 8월 전주시는 중국 메이저도시와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2023년에 개·폐막식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한우미를 외에도 전주의 다양한 모습을 장기간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는 전주의 출입문인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달 주요공약사업인 명품복합환승센터(1단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및 집합교육관, 청년문화놀이터 등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정지 8곳을 차례로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주역세권의 핵심 거점시설이 될 명품복합환승센터는 주차장과 함께 고속버스 및 시내버스가 정



▲종합경기장 전경.



← 미래 신산업 현장 방문

우범기 시장의 포부

“천년 전주 위상 자부심 되찾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후 지난 6개월은 전주에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전주 변화와 발전에 대한 큰 열망을 믿고 천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 500년 건국의 뿌리이자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도시였다”면서 “당시에 전주의 위상이 높았던 건 농업사회에서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인데 7~8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전주는 발전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과거 전주의 높은 위상은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 시장은 전주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강한 경제의 복원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우 시장은 “천년전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 손까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경제다”면서 “전주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역사, 종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산업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엔 지금까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뒤처진 발전을 따라잡고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20~30년 후를 내다본 큰 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변화를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발로 뛰는 빠른 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의 막대한 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의 일대 변혁과 대도약을 위한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의 참여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와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전주도 큰 꿈을 갖고 자신감 있게 대규모 사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범기 시장. →

- 규제 개혁·개발 위해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 설치
- 시정연구원 개원 준비 '착착'
- '최대 과제'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등 개발 착수
-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선도
- 전주-원주 상생협력 추진도



▲전주-원주 상생발전의 물꼬를 트다
민선8기 전주시는 전주가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원주군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하는 것이 필수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14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원주 상생협력 사업 추진 협약을 갖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 협력사업'과 '원주전주 상생 상관계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와 양 시군은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SOC등 대규모 사업까지 사업의 경종과 무관하게 양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등반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내년 전주·원주 상생발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전주원주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장과 함께하는 발로 뛰는 행정

우범기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며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기초자치체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중요성과 적극적으로 과감한 일처리를 강조해왔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관심과 방문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우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첫 방문지로 팔복동 (주)전주페이퍼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강한 경제”에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우 시장은 △서화예술마을 예술관광 조성사업 현장 △전주동화농민협동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지 △원산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지 △예술공간, 완산봉 1973 조성지 등 완산공원 일대의 문화 관광 사업현장에 방문했다. 그리고 공예명인관, 한우미를 국제관 광안대교, 전주영화제작소, 전주에너지센터, 전주 만성지구, 효사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현장 등 주요 현안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아영 기자

← 전주부성 북서편 성곽지구 사발굴조사 현장방문.

